다산포럼

잘 내려가야 높이 오른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산을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경제는 그 유명한 IMF 이래 연평균 0.2%씩 성장이 감소해 왔다. 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 공교롭게도 한 분 재임할 때마다 1%씩 성장 속도가 느려진 셈이다. 언제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 정책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부패가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다 부분적인 사유는 될지언정 전부는 아니다. 진보나 보수, 유능과 무능을 떠나, 지난 20여 년을 죽 그랬으니 추세라고 불러도 무방하리라.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접어드느라 생긴 과정이리라.

여하간 원인과 진단은 다양하겠으나,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빠른 하강임에는 틀림없다. 성장의 속도만 그런 게 아니다. 저성장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고소득 10%의 인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면,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한 미국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 바,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이 함께 있으니, 절대적 빈곤은 차치하고라도 상대적 위화감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일제의 잔재 및 권력 유착에 따른 부자 혹은 재벌을 경험하여 오죽했으면 일각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천민자본주의라 했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는 이처럼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혀, 한국의 공동체가 도대체 지속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점점 무너지는 공동체 위기 앞에 촛불이 밝혀졌다. 촛불은 우리 경제엔 대단한 희망이었다. 촛불 이전 정부의 무능과 편견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민주 시민의 분노는 회차를 더해 감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 갔다. '이게 나라냐'라며 분노하던 울분은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진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단박에 이런 고난쯤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5천만 명이 5개월에 걸쳐 참여한 촛불 혁명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수준과 집단지성을 보여 주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촛불은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배경이자 책임이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빠르게 내딛는 내리막에서 갑자기 멈출 수는 없었다. 정권 초기의 자신감과는 달리 떨어지는 추세를 단번에 막을 수는 없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탓하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이 당장의 구세주가 되리란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한두 가지 정책으로 변화하기에는 사회 저변에서 너무 큰 변화를 겪은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계속 떨어져만 갔다.

이러던 차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에 놀라고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과정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돌부리에 차인 것을 알아챈 것이다. 경향 또는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 상태를 안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 앞에서, '재정건전성'이란 우상을 끼고 살았던 보수 야당마저 재난소득을 하자고 한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식은 이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여 주었다.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백화점 등 대형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그 효과는 이미 경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관찰에 의하면 카드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의 90퍼센트 이상으로까지 증가했으며,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의 경기 반응이 특히 빨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 확충과 경기 대책까지 겸한 복합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니 경기도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 단 일회성에 그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다름없을 것이리라. 재정 정책은 일정 기간 지속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여섯 달은 매달 얼마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야 예산을 절약하고 다소간의 부채도 가능하리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야 어쩌면 너무 건전한 상태이다. 정부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정부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면 된다. 더구나 이번 총선이 말해 주듯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압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하여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게 성찰할 때가 아닌가 한다.

경제이야기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 가지 기본'을 지켜라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최고의 달리기 선수였던 우사인 볼트는 결승선에서 항상 여유 있게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우승 직후 빠지지 않는 익살스러운 '번개 세리모니'는 그 자체가 브랜드화돼 팬들을 즐겁게 한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엉뚱하게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느껴진다. 언감생심 천재 축에는 끼지도 못하는 필자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일을 즐기기 위해 이 유쾌한 천재를 떠올리기도 한다.

필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광주·전남 지역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지역 경제 분석 업무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무리 우사인 볼트를 떠올려도 즐길 수가 없었다. 상당 폭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지만, 조사 결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니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닌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해, 우리 본부의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생각해 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사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는, 제조업 기반 확충의 중요성이다. 광주·전남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석유정제·화학, 철강산업 등이 모두 -10%~-30% 가량의 생산 및 수출 감소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율은 3월 중 전년 동기비 -60%~-80%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특히 문화·공연산업의 매출 감소율은 약 -85%에 이를 정도로 궤멸적이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해 G20국가 평균 성장률(-2.8%)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본 이유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여타 국가들 보다 튼튼하다는 것이었다. 즉, 전염병 위기시 대면 활동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보다는 비대면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의 위기 대응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충실해야 할 기본은, 경제 살리기의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성공적인 '방역'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체의 고객 감소율을 보면 전라권이 -64%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경상권(-74%)에 비해 양호했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도 빠른 방역에 성공했던 우리 지역이 좋았다. 즉, 코로나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당국의 '경제 살리기 운동' 보다도 '방역에 치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뜻한다.

세 번째 기본은, 온라인 비대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화됐던 2월 중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광주시가 -16.6%의 감소를 나타냈음에도, 온라인 매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가 +51.4%로 큰 폭 증가를 보였다.

문제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 등 온라인 관련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 즉 온라인 매출의 혜택을 지역 경제가 누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에서 온라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K팝, K무비, K방역, 최근에는 K프로야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제조업 강국이자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주장도 한다.

최근 우사인 볼트는 결승선에서 경쟁자를 압도적으로 따돌리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범(?)이라고 능청을 떤다. 귀엽고도 얄미운 이 천재 녀석을 따라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기본으로 돌아가 하체 근육부터 단련해야 하지 않겠나?

기 고

국가 균형 발전,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김보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4·15 총선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국정 운영 동력을 기반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다.

지난 시간, 문재인 정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공존한다.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48조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방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올 상반기 코로나 시국, 총선과 같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 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9조 6000억 규모의 22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나주 한전공대 개교가 확정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물꼬를 트게 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일이다.

하지만 아직 안주하기에 이르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공공 의료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지역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지역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길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 체계는 지역 경제의 위기,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지속적이고 강력한 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균형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와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균형 발전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살리기' 정책공약이다. 대학은 인구 증가뿐 아니라 연구 시설, 산업 시설, 나아가 생활 여건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커뮤니티이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혁신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혁신도시 정책 등과 맞물려 있으면서도 지역 혁신 역량 강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자체는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한전공대,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국회는 한전공대 개교를 시작으로 지역 특화 대학이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입법적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 지방이 공부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 나아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SOC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 위주 균형 발전보다 생활 밀착형, 사람 중심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국회가 이러한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크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대학 육성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등 다양한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社 說

5·18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어제 일제히 광주를 방문해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5·18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당 일각의 과거 '5·18 망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5·18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 치유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이날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특히 5·18 진상 규명과 관련 민주당은 5·18 조사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는 5·18 관련자가 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5·18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완전한 진상 규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당신들의 머슴이 아니다

비록 타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입주민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경비원 최 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녹음 파일까지 남긴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 경비원은 '음성 유서'를 통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XXX 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머슴 취급을 받으며 입주민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는 떨렸고, 흐느낌은 더욱 커졌다. "입주민의 얼굴만 봐도 무서웠다"고 토로한 그는 "가해자인 입주민이 반드시 처벌받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힘이 되어 준 주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았다. "○○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 엄마 아빠, ○○슈퍼 누님, ○○○○호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토록 선량한 우리의 이웃을 누가 죽였는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입주민도 최 씨에 대해 "자기 가족인 것처럼 매번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글에는 지난 주말까지 40여 만 명이 동의했다.

그동안 언론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보도됐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갑질은 여전히 계속됐고 경비원들은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해고될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용역업체 등을 통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갑질 방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無等鼓

5·18 민주광장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0년 5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 가운데 하나가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어제 광주일보 1면에 다시 실렸지만,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으로 금남로에 시민들의 피가 뿌려지기 전인 5월 16일에 열린 '민주화 대성회' 모습은 당시 전남도청 옥상에서 촬영됐다. 이날 집회는 암흑과 같았던 박정희의 18년간 유신독재를 민주화의 횃불로 밝히겠다는 의지를 담아 평화적인 야간 횃불시위로 이어졌다.

하성흡 작가의 작품 '1980.5.21. 발포 후'(2017년 작)는 도청 앞 광장의 또 다른 모습을 포착했다. 평화롭게 시민들의 집회가 이뤄지던 16일과 달리 공수부대가 21일 오후1시 광장을 등지고 충장로와 장동, 금남로 방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에도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자리했다. 시위 진압 경찰의 최루탄에 희생된 고 이한열 군의 유해가 망월동에 안장된 뒤 학생과 시민들이 연좌한 채 새벽까지 시위를 벌인 곳도 이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1997년 3월, '가로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을 '5·18 민주광장'으로 이름 붙였다.

어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 19' 여파로 참석자들이 띄엄띄엄 부채꼴로 거리를 두고 앉아 이채로웠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만한 4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80년 5월의 광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암매장 등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의미심장하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